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대비 정책방향

김 창 섭 수의사무관
농림부 가축위생과

1. 머리말

필자는 이 글을 쓰기에 앞서 1997년 6월 돼지콜레라를 비롯한 9종의 주요가축전염병에 대한 근절목표를 수립한 때가 어제와 같은 느낌이 들고, 1999년도 모든 방역행정력과 기술인력을 동원하여 본격적인 근절대책추진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의 여건에 돼지콜레라 근절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되새겨 진다.

근절 성공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우리 양돈농가와 관련단체의 총체적인 역량이 결집되면서 그 가능성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동 질병이 1947년 국내 최초 확인이래 매년 전국적인 발생을 보이던 것이 '99년 8월 경기 용인의 마지막 발생이래 16개월동안 비발생 상태를 유지되는 것은 성공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분석한다.

불행히도 작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접종 중단시기가 늦어지고 돼지콜레라 방역이 구제역 방역에 따른 상대적인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만 면역형성률(예방접종률)이 96%이상 유지되고 야외바이러스의 확인과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새삼 방역에 대한 우리 양돈농가의 의지와 일선 공무원, 민간방역요원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이다.

다만, 최근 일부 양돈관계자들이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중단이후 재발생 될 경우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는 의견의 개진은 방역업무 실무자로서 아쉬운 감을 주는 일면도 있다. 분명 돼지콜레라 청정화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재개와 발생국산 수입

분명 돼지콜레라 청정화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재개와 발생국산 수입돈지조치로 인한 양돈산업 안정의 실익은 우리 양돈농가에 안겨지고 정부나 민간방역단체는 그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건만 청정화를 정부의 몫으로 미루는 것은 잘못된 관념이라고 역설하고 싶다.

금지조치로 인한 양돈산업 안정의 실익은 우리 양돈농가에 안겨지고 정부나 민간방역단체는 그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건만 청정화를 정부의 몫으로 미루는 것은 잘못된 관념이라고 역설하고 싶다.

지난 9월 "돼지콜레라 근절추진 보완대책"을 수립시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하여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을 구제역 청정화 추진시기에 맞추어 예방접종 중지시기를 '00.10월에서 '01.3월로 조정하여 추진키로 하였고 접종중단 이후 구체적인 방역대책은 접종중단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을 수립하였었다.

2. 근절대책 추진 평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은 정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 실시, 농가별 소독약 공급, 과거 발생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한 지역전담제 실시,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전문지 등을 통한 광고게재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

동 대책 추진은 작년 2/4분기 구제역 방역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양돈농가의 협조와 일선 방역본부 요원의 노력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99년 7월부터 실시한 1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및 나정착농원 예방접종 지원과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방법을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에서 농장채혈로 전환한 것은 예방접종률을 높히는데 큰 계기가 되었었다.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장채혈은 작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연 52,911농가 476,098두를 채혈하여 검사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지속적으로 96%이상 유지되었고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225농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존재 확인을 위한 항원검사도 3만건 넘게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작년 3월15일 과천청사 운동장에서 예방접종 시연회 개최와 축산종합시상에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비중을 높혔던 것도 사업추진에 활성화를 기하였다고 평가되었다.

3. 예방접종 중지조건 및 국내외 상황

가. 예방접종 중지조건 및 지역별 추진상황

예방접종 중지조건은 크게 과거 1년간 비발생, 95%이상 면역형성률의 최소한 6개월 이상 유지, 돼지콜레라 야외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98. 2월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99. 12월 청정화를 선포하기도 하였다. 사진은 본회 제주도협의회(회장 이문하)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한 양돈인 대회.

바이러스의 미존재, 접종 중지후 사후관리 체제 구축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사후관리 체제구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지조건에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후관리 체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지 이후 돼지 이동에 대한 통제조치에 농가와 유통상의 협조 가능성, 예방약 비축, 재발생시 확산위험이 높아지고 사육돼지 전두수 살처분 조치와 장기간의 이동제한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전체를 정부의 몫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지역별 예방접종 중지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제주도가 '98. 2월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그해 11월 1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지만 예방접종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전두수 살처분 조치후 제주도내 양돈농가의 협조(발생농가 신규입식 돼지 자금지원)를 얻어 '99.12월 청정화를 선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양돈농가들이 현재 1억원 이상의 방역자조금을 조성하여 만일의 사태 발생시 정부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처할 계획으로 있다.

기타 경북 울릉군이 '99.12 예방접종을 중지하였고, 금년 1월에는 강원도가 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 예방접종을 중지하였다.

나. 일본의 접종중지 상황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은 당초 계획한 대로 '00. 10부터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 재발생시 농가의 방역호조금 50%, 정부 50% 부담원칙을 세워 대처키로 하였다. 특이할 사항은 일본 역시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지조치 이후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접종을 실시토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예방접종 중지이후 계속하여 접종을 하고 있는 농가현황은 작년 10월말에 47개 도도부현중 12개현 376농가(사육농가 대비 3.2%) 427,144두(사육두수 대비 9.6%)였으나 11월말에는 563농가(4.9%), 532,791두(12%)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예방접종 두수 비율기준 = (연간 출하두수+번식돈두수) ÷4

4. 예방접종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방향

예방접종 중지이후 중

점 방역사업 방향은 일정기간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원검사를 통한 야외바이러스 확인의 지속적 실시, 농가별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이동돼지에 대한 생산지 확인서 제출, 감염 의심돼지 발견시 신속한 신고여건 조성, 수입검역 및 수입돼지의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책의 추진은 현재 양돈농가의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경우 우리가 우려하는 동 질병 재발생은 막을 수 있다고 보나 만에 하나 재발이 될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의 사육돼지에 대한 이동제한과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돼지 살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예측된다.

재발생시 방역대를 설정하고 긴급 예방접종을 대비한 예방약의 비축, 살처분 보상금의 확보 등 제도개선과 소요예산의 확보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지난번 구제역 사태나 용인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시 애로를 겪었던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확보가 문제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입안예고를 하였던 "가축사체의 재활용 방안"을 조기 확정하여 살처분 사체를 사료원료나 비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체의 재활용 문제는 EU의 광우병 관련 가축에 대한 육골분사료의 이용금지 문제와 연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중지결정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 이해와 동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도 농가 스스로 방역호조금을 조성하고 인식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와 단체가 접종중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여 계속하여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얻어 예방접종을 허용한 결과 17개현의 중규모 이상 사육농가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방향이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은 우리의 방역역사상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민간방역단체가 탄생되었고 작년말 돼지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출연하는 농가가 있을 정도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결국 예방접종 중지와 청정화를 얻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예방접종 중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일본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높은 예방접종률과 1년 이상의 비발생, 야외바이러스의 미검출 등 조건이 부합된 만큼 이제는 예방접종 향상을 위해 투자했던 인력·예산을 다른 부분에 돌려 구제역, 오제스키병 등 타질병 방역에 투자를 해야 양돈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시기를 상실하게 된다면 개방화 시대에 양돈업의 생존 문제가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됨을 이제는 농가들이 인식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금년 1월중 접종중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수립하여 양돈단체와 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2월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다시 한번 돼지콜레라 청정화는 우리 양돈농가와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근절대책 추진에 양돈농가의 변함없는 협조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다. 양돈